

문01.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 행정사)

-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자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 ㄷ. 국·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 ① \neg , \perp
② \neg , \sqsubset
③ \perp , \sqsubset
④ \perp , \equiv

문02.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8 행정사〉

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neg, \perp ② \neg, \sqcup
③ \perp, \sqsubset, \sqcup ④ $\neg, \perp, \sqsubset, \sqcup$

문03.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예산편성지침통보
② 예산의 사정
③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④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문04.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교육행정 9급)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05.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7 국회직 8급〉

7.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마.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가하여야 한다.

- ① \neg, \perp, \top ② \perp, \exists, \square
③ \neg, \top, \square ④ \perp, \top, \square

문06.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서울7급〉

- ① 정치 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 ② 일반적으로 예산의 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 ④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문07.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08.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문09.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행정사>

- ①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 ②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 ③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 ④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 ⑤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10. 예산의 이월(移越)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고이월(事故移越)은 연도 내의 지출을 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경비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재차 이월이 가능하다.
- ② 명시이월(明示移越)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명시이월(明示移越)과 사고이월(事故移越)은 모두 예산안정성이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 ④ 사고이월(事故移越)은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문11.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 경정승진>

- ①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② 명시이월은 연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 ③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그 전용 내역을 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12.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② 명시이월은 연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 ③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1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서울9급>

- ①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 ② 전용이란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 하는 경비이다.

문14.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교육행정9급>

-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 ③ 예산의 전용은 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문15.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가9급>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문16.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잘못 제시된 것은?

- ① 세출예산금액 범위 이외의 영역이 대상이 된다.
- ②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이다.
- ③ 법률에 의해 부담하게 되는 채무도 해당 영역이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1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 ②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다음연도까지만 효력이 있다.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대상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문18.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ㄷ
- ③ ㄱ, ㄴ ④ ㄴ, ㄷ

문19.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국회8급>

- ①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맡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문20.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국가직 9급>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 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문21.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회8급>

- ①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문22. 「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 국회8급>

ㄱ.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23. 정부기관의 구매는 크게 분산구매와 집중구매로 나눌 수 있다. (분산구매와 비교한) 집중구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매조직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 ② 부패나 부당거래 통제에 용이하고 재정적 통제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③ 중앙구매기관을 경유하여 구매해야 하므로 구입절차가 복잡하고 적기에 물품을 공급하기 어렵다.
- ④ 조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24.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가7급 추가>

- ① 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 ③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④ 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문25.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행정사〉

- ①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 ②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 ③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④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문26.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 경정승진〉

- 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시 자산의 증가는 기록하되 비용이나 부채는 기록하지 않는다.
- ② 산출물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 ③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용이하다.
- ④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문27.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회9급〉

- ① 단식부기에서는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②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성과주의예산, 성과감사 등 비용과 성과 개념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이 가능하다.
- ③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복식부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발생주의에서 인정되는 계정과목에는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이 포함된다.

문28. 다음 발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금을 이동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 ② 미수금, 미수이익 등이 자산으로 인식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처리된다.
- ③ 원가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④ 발생주의는 복식부기뿐만 아니라 단식부기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③	④	①	①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②	④	②	③	④	①	④	④
21	22	23	24	25	26	27	28		
③	②	①	④	④	②	③	④		

01. [정답] ③

[해설] ③ ○ : ㄴ, ㄷ 이 옳은 지문이다.

ㄱ. × : 벌금과 과태료는 조세가 아닌 세외수입이다.

ㄹ. × : 민간자본도 복지시설 건설에도 유치할 수 있다.

02. [정답] ④

[해설] ④ ○ : ㄱ, ㄴ, ㄷ, ㄹ 모두 예산의 형식에 포함된다.

03. [정답] ④

[해설] ④ ○ : ㉔ - ㉑ - ㉒ - ㉓ - ㉔ 의 순서로 예산이 편성된다.

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㉑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㉒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㉓ 기획재정부는 각 부철의 예산요구서를 다음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예산사정한다.

㉔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04. [정답] ③

[해설] ③ × :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05. [정답] ④

[해설] ④ ○ : ㄴ, ㄷ, ㄹ 이 옳은 지문이다.

ㄱ. × : 예산과 법률은 상호 개폐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 심사는 있을 수 없다.

ㄹ.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06. [정답] ①

[해설] ① ×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치 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과정의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07. [정답] ①

[해설] ① ○ :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다.)

③ × :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배정이라고 한다.

④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ㄷ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만, 예산집행지침은 1월 말까지 통보한다.

08. [정답] ②

[해설] ② × :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해당한다.

09. [정답] ④

[해설] ④ × :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함께 정책적 분석도 실행한다.

② ○ :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어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적용되었다.

③ ○ :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이나 구체적인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0. [정답] ①

[해설] ① × :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

11. [정답] ③

[해설] ① × :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얻고 사용할 수 있다.

② × :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다.

④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전용 내역을 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정답] ③

[해설] ③ ○ :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을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부속기관·하부조직에 재배정을 한다.

① × :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다.

④ × : 전용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3. [정답] ②

[해설] ② × : 이용이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이다.

14. [정답] ④

[해설] ① × :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고 예산을 집행한다.

② × :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③ × : 예산의 이용이 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한다.

15. [정답] ②

[해설] ② × : 예산의 전용을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예산의 이용은 미리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 예비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과 같이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6. [정답] ③

[해설] ③ ×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정답] ④

[해설] ④ ○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대상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반면 계속비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① ×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정부가 재원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② ×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채무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로 국회의 승인의 효력은 기간 제한이 없이 수 년에 걸쳐 나타난다.

③ ×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채무부담의 권한만 부여한 것으로 지출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18. [정답] ①

[해설] ① ○ : ‘ㄱ’ 만 옳은 지문이다.

ㄱ. ○ : 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예산에서 남는 돈을 의미하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포함되지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므로 세계잉여금에서 제외된다.

ㄴ. × :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굳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계잉여금과 적자국채발행은 부(-)의 관계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반드시 세계잉여금과 적자국채발행은 부(-)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추계를 잘못된 것으로 건전재정원리에 비추어볼 때 세계잉여금은 적을수록 좋다.

ㄷ. × :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교부세 정산 →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 국가채무 상환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 순으로 세계잉여금을 사용해야 한다.

19. [정답] ④

[해설] ① × : 예산재배정이 아니라 예산배정에 대한 설명이다.

② ×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③ × :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⑤ × :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정답] ④

[해설] ④ × :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확인 후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①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정답] ③

[해설] ③ × : 중앙관서의 장(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 특별지출예산서 등이 있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별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28. [정답] ④

[해설] ④ × : 현금주의는 단식부기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와 결합도 가능하다. 그러나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와 결합만 가능하다.

③ ○ :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므로 정부서비스의 원가를 현재보다 훨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산출물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해 부문별 성과측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22. [정답] ②

[해설] ② ○ : ‘ㄱ, ㄴ, ㄷ’ 이 옳은 지문이다.

ㄴ. × : ‘차관물자대’는 외국의 실물자본을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대금결제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차관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23. [정답] ①

[해설] ① × : 분산구매의 장점이다.

② ○ : 집중구매의 경우 구입절차가 많은 서류 업무로 복잡해지지만, 과정 자체는 표준화되어 부패나 부당거래 통제에 용이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적 통제체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

24. [정답] ④

[해설] ④ ×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모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25. [정답] ④

[해설] ④ × :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현금흐름보고서(현금흐름표)는 제외된다.

26. [정답] ②

[해설] ② ○ : 산출물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고 성과평가에 유리하여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① × :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시 자산의 증가는 재정상태표의차변에 기록하고 부채는 대변에 기록한다. 또한 비용이 발생하면 재정운영표의 차변에 기록한다.

③ × : 발생주의는 자의적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자산평가 등에 있어 주관성이 나타난다.

④ × :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수입과 지출은 현금주의와 관련된다.

27. [정답] ③

[해설] ③ ×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고, 법률(「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